한 총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국민담화…“환자 곁 지켜달라”

“의대정원 확대 더 늦출 수 없다”
“이대로는 의사 1만5천명 부족해”
“2000명 증원, 전문가들과 논의”

정부는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이번 주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며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또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희면 기자

서동욱 의장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나서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각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동욱 의장은 이민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이민청 설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서동욱 의장은 “지방은 인구감소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생업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면서, “근 20여 년간 논의되어 온 이민청 설립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여 실행에 옮기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시도로 일부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작년 12월 이민청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동훈 ‘잘한다’ 53% · 이재명 38%’…조국 출마 ‘부적절’ 63%

한동훈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으로 이어져
조국 출마, 민주당 지지층선 60%가 ‘적절하다’
86세대 ‘물러나야 한다’ 53.7%… ‘용퇴론’ 우세

여야 대표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 위원장에 대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53%는 ‘잘한다’, 40.7%는 ‘잘못한다’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선 ‘잘한다’가 38.0%, ‘잘못한다’가 56.6%로 부정적인 답변이 과반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당 지지도에도 반영됐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44.3%, 민주당은 37.2%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p)로 오차범위(6.2%p)를 넘어섰다.

지역구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44.3%, 민주당 35.9%, 개혁신당 7.5%, 녹색정의당 2.1%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선 국민의힘 43.0%, 민주당 30.3%, 개혁신당 9.9%, 녹색정의당 3.6% 등이 차지했다.

KSOI 측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은 국민의힘과 친문, 친명간 갈등이 비춰지는 민주당이 대비가 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분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전체 유권자와 민주당 지지층의 답변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63.1%, ‘적절하다’ 29.9%, ‘모름’ 7.0% 순이었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층에선 60.8%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5%에 불과했다.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층에선 ‘적절하지 않다’ 65.0%, ‘적절하다’ 29.8%로 전체 의견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86세대 용퇴론’에 대해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53.7%,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26.3%, ‘모름’ 20.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 · 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